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북·러관계의 진전: 합의와 전망

우평균 (한양대학교 HK연구교수)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2013년 나진 철도 현대화 사업 완료를 계기로 경협이 추세가 가속되기 시작하면서,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림 합병 이후 급속하게 밀착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양국관계의 진전은 고위급 교류 및 경제협력의 분야에서 눈에 띄는 협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군사적 분야의 교류는 베일에 싸인 채 모종의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언론을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북·러 경협은 여러모로 한계를 안고 있어 사업 수행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힘든 점이 존재한다. 이 같은 문제는 북·러관계가 2013년 이후 확연하게 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대북한 영향력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의 생존력 확보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가일층 강화된 북·러관계는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극동개발정책과 병행하여 러시아가 추진하는 한반도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변함이 없지만, 북·러관계 자체는 유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북·러관계 밀착의 초점을 경제뿐 아니라, 군사적 시각에서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러시아 국내정치에서의 애국주의 조류가 핵심 요인으로 존재하는 한 북한의 활용 가치 역시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5.05.12) 발표자료

목 차

1.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북·러관계의 진전 양상
2. 북·러관계 평가
 - 가. 대외정책 측면
 - 나. 경제적 측면
 - 다. 종합 평가
3. 북·러관계 전망
4. 정책 제언

1.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북·러관계의 진전 양상

- 2011년 8월 러시아 극동지방 울란우데에서 러시아의 메드베데프(D. Medvedev)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간의 정상회담이 상회담이 개최되면서 북·러관계가 밀착관계를 유지하기 시작함.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림 합병 조치 이후 러시아가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는 국면에 접어들면서 한층 더 유착되는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음
- 2014년 이후 양국의 주요 협력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먼저 고위급 교류를 살펴볼 수 있음
 - 2014.2.7,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차 방러
 - 3.8~10, 러시아의 6자회담 차석대표 로그비노프(G. Logvinov) 외무부 북핵 담당 특별대사 방북
 - 3.24~28,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 갈루시카(A. Galushka) 방북, 북한과 개성공단 진출 논의(3각 협력 사업 언급)
 - 3.27, 북한, 유엔총회가 채택한 크림 합병 규탄 결의에 반대
 - 3.28, 러시아, 유엔(UN)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에서 반대표 행사
 - 4.21, 러시아 국가두마(하원)가 북한의 대러 채무 108억 달러 가운데 90%를 탕감하는 협정 비준
 - 4.22~28, 러시아 에너지안전센터 대표단 및 사할린 주정부 대표단 방북
 - 4.28~30, 트루트네프(Y. Trutnev)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 방북
 - 8.13~17, 북한, 러시아 무기박람회 대표단 파견
 - 10.1~10, 리수용 북한 외무상 방러
 - 11.14, 북한 농업부 부부장 하바롭스크 방문
 - 11.18, 북한 최룡해 특사 푸틴 러시아 대통령 면담
 - 11.19, 북한군·러시아군 부총참모장 회동
 - 12.19, 러시아 2015년 5월 7일, 2차대전 승전 기념 70주년을 기념한 푸틴 대통령의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초청 발표
 - 2015.2, 리용남 북한 무역상 방러, 상호 무역량 10억 달러 목표 제시
 - 4.13, 북한 로두철 내각 부총리와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방러, ‘제4회 모스크바 국제안보회의’ 참가
 - 4.24, 갈루시카 장관 방북, 정부 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회담 개최, 러시아의 밀과 육류 수출에 합의하고 북 대륙붕 지역 등에서 가스과 원유 탐사를 러시아 에너지 기업들이 추진하기로 함

- 4.30, 러시아, 김정은의 전승식 불참 발표, 불참 원인으로는 의전 문제, 김정은의 다자 회동에 대한 부담감, 북한의 무기 구입 문제 및 경제 지원 지속 여부 등 의제 불일치 등이 거론됨
- 경제협력과 관련한 교류 사항은 다음과 같음¹⁾
 - 2014.6.5, 북한 나진항에 러시아 보조 함대를 주둔시키는 방안 논의, 또한 북한은 러시아 기업에 금광 채굴 및 광물 매장지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권 제안
 - 7.18, 나진항 3호 부두 터미널 개통
 - 9.8, 북한, 러시아 기업인에 장기 복수비자 처음 발급
 - 10.20, 북한, 러시아 루블화 무역 결제 시작
 - 10.21, 러시아 극동개발부, 러시아가 250억 달러(26조 원)가 소요되는 북한 내륙철도 현대화 프로젝트(일명 ‘포베다’) 발표
 - 11.14, 양국 간 농업협력 논의. 북한, 러시아 극동지역 농지 임차 희망 피력
 - 12.3,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식량 5만 톤 무상 지원 완료
 - 2015.1, 북한, 송·배전 기술자 러시아에 파견, 러시아와 전력망 개선 사업 추진 가능성 알려짐
 - 1월 말 러시아가 중국을 통해 북한에 약 50만 톤의 원유를 보낸 것으로 알려짐, 더불어 차관 형태로 대북 식량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음
 - 북한 당국 내 북러 경협 전담부서 및 북러 상공회의소도 창립된 것으로 보임
- 군사 교류 진척에 대해서는 간간히 보도가 되고 있으나, 아직 파악 가능한 것은 거의 없음
 - 2014년 11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방러와 2015년 1월 노광철 인민군 총참모부 부참모장의 방러 등으로 미루어 양국 간 군사협력에 대한 협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협정 초안에는 양국이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공동 군사위원회를 설립할 것으로 알려짐
 - 2015년 1월 30일 발레리 게라시모프(V. Gerasimov) 러시아 총참모장이 2015년 러시아 군사정책 방향을 공표한 내용 중에 북한, 베트남, 쿠바, 브라질 등의 국가들의 육해공군이 참여하는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할 계획이 들어 있어 주목을 끌²⁾
 -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북한의 숨통을 트여준 러시아가 군사적 지원까지 북한에 해주다면 북한의 재래식 전투력이 향상될 수 있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지원 요구에 쉽게 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반면,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북한의 숨통을 트여준 러시아가 군사적 지원까지 북한에 해주는 것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지원 요구에 쉽게 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반면, 러시아는 북한으로 군사력을 투사하는 데는 관심이 클 것으로 보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 국가들의 제재가 야기한 경제적 어려움과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일환으로 반서방 동맹이 가능한 국가들에 북한이 포함됨.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가 북·러관계의 강화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미국의 대북 경제 봉쇄 효과가 약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음

- 북한으로 군사력을 투사하는 데는 관심이 클 것으로 보임
-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러시아의 대북 접근이 경제적 이유에서가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관계를 강화해 북한의 호전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미국의 관심을 유럽에서 동북아로 돌리게 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면, 이와 관련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³⁾
- 러시아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 내 러시아 군 기지 확보일 것으로 여겨지나, 이 문제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만족할 만한 지원을 얻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시간을 두고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그 밖에 북한은 2015년 3월 11일, 2015년을 ‘양국 친선의 해’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하는 등, 양국 국가기관, 지역 교류단 교류 및 접촉을 활성화하는 조치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가 대북 투자를 약속하고, 대북 원조를 실시하는 등, 러시아의 지원이 대부분이지만, 실제로 양국 협력이 급격하게 촉진되는 양상은 2013년 말 중국과 북한 김정은 지도부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2013년 말부터 뚜렷하게 나타남

2. 북·러관계 평가

가. 대외정책 측면

-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경험 및 투자 제안을 하는 데 대한 분석은 다차원에서 가능
-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 국가들의 제재가 야기한 경제적 어려움과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일환으로 반서방 동맹이 가능한 국가들에 북한이 포함됨
-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러시아가 그 시기에 맞추어 나진-선봉 특구를 비롯해 대북 투자를 늘리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이를 통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약화시키면서, 그 대신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음
- 러시아가 북한과의 친선관계를 통해 한반도를 대미-대일용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데 대한 지적도 가능. 즉 북·러관계는 미·러관계의 하위 레벨로 존재하는데, 과거에 미·러관계가 우호적이었을 때 러시아는 북한과 거리감을 유지. 지금처럼 미·러관계가 적대적일 때는 냉전 초기 한반도 정책으로 회귀하여 미국을 좌절시키려 함(Jackson 2015)
-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가 북·러관계의 강화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미국의 대북 경제 봉쇄 효과가 약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음

- 북·러 밀착은 정보 및 군사협력 차원에서 ‘위험한 연합’
 - 미국은 스노든 사건을 비롯해 러시아가 미국 관련 정보를 많이 갖고 있으며, 이 같은 정보가 북한에 넘어가는 것을 경계.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의 취약성을 파악하여 잘못된 계산을 할 가능성 우려⁴⁾
 - 러시아제 신무기에 대한 북한의 집요한 요구 및 러시아의 한반도 군사적 진출 욕구를 감안하여 양국 간 군사적 접근에 대한 관심 제고

나. 경제적 측면

- 최근 북·러관계 밀착 현상에 있어, 특히 언론을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분야로 양국 간 경제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그러나 경험은 사업의 지속성과 성과(경제성)를 기대하기 어려운 난점들을 갖고 있음
- 무엇보다도, 북한과 러시아 간의 상호 이익을 보장하는 무역 상품 등으로 볼 때, 양국 간 호환성이 없거나 미미한 것이 문제
 - 북한에 절실한 것은 자본 수입, 원자재와 중간재 및 소비재나 식량 공급이지만, 러시아는 이를 해결해주기 어려움
 - 러시아보다는 중국(혹은 한국)이 북한과의 경험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으며, 이는 북-중 교역과 북-러 교역을 대비할 때 명확하게 드러남 (2013년 북-중 65억 불, 북-러 1억 불)
- 러시아 경제 자체의 문제 및 기업투자의 문제도 존재
 - 러시아 경제가 유가 하락 및 루블화 가치 하락으로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대외 지원을 위한 경제적 여력 역시 차츰 고갈되고 있는 상황임, 즉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대외 투자를 하기 어려워짐
 - 러시아의 대북 투자의 주체인 러시아 국영 및 민간 기업들의 지속적인 대북 사업 참여를 전망하기 어려움, 러시아 정부의 기업에 대한 보증 혹은 보조금 지급 시 실질 가동 가능⁵⁾
 - 2014년 10월 공표한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 추진 주체인 러시아 측 사업자 ‘모스토비크’가 이미 파산 상태임
-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북한과의 협력을 통한 이익이 아니라 한국을 끌어들여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⁶⁾
 - 러시아의 대유럽 가스 시장 장악에 대한 유럽의 우려 및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의 유럽시장 접근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예상 가능

최근 북·러관계 밀착 현상에 있어, 특히 언론을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분야로 양국 간 경제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그러나 경험은 사업의 지속성과 성과(경제성)를 기대하기 어려운 난점들을 갖고 있음

북한이 기존의 제재를 받는 상황에 더해 인권 문제로 더욱 고립이 심화되는 절박한 처지에서 우방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러시아가 호응하는 것은 북·러 양국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지만, 이 같은 양국의 전략적 제휴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한국으로의 가스관 부설 및 판매 시장 확보는 일본을 포함한 태평양으로의 진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됨
- 부문별로 러시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험을 통해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
- 물물 교환 방식으로 양국 교역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새로운 시도. 북한이 구리나 주철 등을 러시아에 수출하고 그 대신 러시아가 에너지나 육류, 밀 등 북한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방식에 합의했다고 함. 결제는 자국화폐로 함. 즉 자국화폐 교역 방식의 물물 교환 방식의 바터무역은 미국의 달러패권에 대항하고자하는 시도
- 러시아 정부가 2014년부터 줄곧 개성공단에 참여할 의사를 피력하고 있음. 러시아의 고려인 출신 기업인들이 식품 생산 관련 사업을 개성공단에서 할 수 있음을 밝힘⁷⁾
- 러시아의 개성공단 참여는 한국 정부의 5·24 대북 제재 조치의 완화 혹은 해제와 연계된 문제라 러시아 정부가 줄곧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일관성을 갖는 정책임
- 전력난으로 인해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광물자원에 대해 러시아가 채굴권을 갖거나, 혹은 다른 광산에서 채굴한 알루미늄 원료나 마그네슘 원광석을 수송해 연해주 지역에서 제련하는데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
- 광물 자원 획득은 러시아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 문제는 북한이 협력 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을 비롯한 대가를 제대로 지불할지가 미지수

다. 종합 평가

- 양국관계가 급속하게 가까워지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이로 인해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 역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러시아의 영향력은 과거처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북한이 기존의 제재를 받는 상황에 더해 인권 문제로 더욱 고립이 심화되는 절박한 처지에서 우방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러시아가 호응하는 것은 북·러 양국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지만, 이 같은 양국의 전략적 제휴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러시아가 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데다가, 북한의 개혁·개방 없이 북한 지도부에게 체제 존속 및 핵·경제 병진론 강화를 위한 경화 수익만을 안겨주려고 하는 경우, 러시아가 주도하는 북·러 경험사업에 한국 등 제3국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하기는 어려움⁸⁾

- 김일성의 행적을 흉내 내는데 치중하는 김정은의 통치방식이 대외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1960년대 중소분쟁의 와중에서 김일성이 대 중소 줄타기 외교를 했던 것처럼 김정은이 이를 모방해 중국과 관계가 소원해지자 러시아와 가까이하려 한다는 시각 역시 김정은으로서는 타당할지 모르나, 실제로는 의미가 별로 없음
 - 앞서 북·러 경협이 문제점에서 지적했듯이, 북한의 대외관계 비중에 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과 비교할 때, 러시아는 비교 대상이 되기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에 60년대식 ‘줄타기 외교’로는 한계가 있음. 즉, 이 같은 방식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비슷한 영향력을 구사할 경우에만 의미가 있음
- 남·북·러 협력을 포함하여 북한과 러시아가 추진하기로 한 사업이나 무역 프로그램은 남북관계의 진전이 선행되지 않는 한 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성격을 포함하고 있음
- 가스관 연결 사업의 경우 한국에 거점을 만들어서 유라시아로 가는 관문 항구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점이 분명하지만, 남북관계의 담보 상태로 인해 러시아가 어쩔 수 없이 북의 항구의 정유공장 재건 및 부두 현대화를 추진하여 수출 항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논리가 제시됨
 - 형식적으로 이 논리는 맞지만, 남북관계의 현실은 복잡하며 진전이 어려운 상황

3. 북·러관계 전망

- 김정은의 2015년 5월 방러가 취소되었지만, 2015년 중 양국 정상 간 회담 가능성은 아직 충분히 남아있음
- 만수로프(A. Mansurov) 등 전문가들은 김정은과 푸틴 간의 상호 방문 가능성을 예상⁹⁾했는데, 김정은이 방러를 취소한 상태에서 푸틴의 답방은 어렵게 되었지만 러시아 내 양국 정상 회담, 혹은 푸틴의 방북을 추진할 여지는 있음
 - 만일 북한의 러시아제 무기 구매 문제가 결렬되어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이 취소되었다면, 이 같은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는 한 정상회담 개최는 지연될 수 있음. 현재 러시아의 입장은 유엔의 대북 제재를 어기는 (Su-35 등 첨단) 무기에 대해 판매 불가 입장¹⁰⁾
 - 2000~2001 양국 정상회담 당시 북한의 Su기 구입 요청에 대해 러시아가 거부했으며, 당시 러·미관계는 좋았음. 이후 2011년까지 정상회담 개최되지 않음

남·북·러 협력을 포함하여 북한과 러시아가 추진하기로 한 사업이나 무역 프로그램은 남북관계의 진전이 선행되지 않는 한 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성격을 포함하고 있음

**러시아는 남·북·러
3각 협력에 기반을 둔
북·러 경협이
큰 그림을 계속
고수하면서, 한국의
대북 자본 투자를
지속적으로 권유하는
정책을 유지할 것임.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고
서구의 대러 제재가
계속된다면,
북·러관계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짐**

- 양국은 당분간 대외관계에서 수세에 처한 쌍방의 약점에 대처하는 연합전선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은 유엔 차원에서 인권문제 제기에 대한 러시아 및 러시아 동조 국가들의 지원을 기대. 러시아도 대북 제재가 시행되고 있는 북한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를 지속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러시아의 시각 및 러시아의 구소련 지역 외교 정책, 더 나아가 러시아의 반 서구적인 정책의 정향성에 대해 북한은 전폭적인 지지를 유지하고 있음
 - 북한은 북핵문제를 위한 6자회담 재개 및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유인책 제공을 주장하는 러시아(및 중국)의 입장과 보조를 맞춤
- 러시아는 남·북·러 3각 협력에 기반을 둔 북·러 경협의 큰 그림을 계속 고수하면서, 한국의 대북 자본 투자를 지속적으로 권유하는 정책을 유지할 것임
 - 철도 연결, 가스관 부설 및 송전망 연결은 2000년 푸틴이 처음 집권한 이후 변함없이 추구해 온 정책으로서,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한반도 진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러시아가 북한의 대러 채무를 사실상 탕감해주고,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북한의 외화 부족을 감안하여 채굴권이나 현물 지급으로 지불을 대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러시아로서는 사실상 북한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도를 다해준 셈이 됨
 - 더 이상 러시아가 북한에 해줄 수 있는 파격적인 조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즉 러시아로서도 한국의 자본이 투여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내기가 힘들 것으로 보임
 - 한국으로서도 대북 투자와 관련해 과거와 특별히 상황이 바뀐 것이 없기에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대북 경협에 뛰어들기 어려움, 따라서 한국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고 서구의 대러 제재가 계속된다면, 북·러 관계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짐
 - 우크라이나 사태의 지속은 유럽도 힘들게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러시아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고, 푸틴체제의 존속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음. 러시아 경제의 침체는 대북 지원을 지속하기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러시아 국내적인 명분에서도 설득력을 얻기 힘들
 - 북한은 2014~15년 원유, 식량, 전력 등 자국에 절실한 것들을 지원해 준 러시아에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음. 반면, 북한으로서도 러시아의 지원에 상응하는 대가를 어떤 형식으로도 지불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국 간 경제 협력은 시간이 갈수록 쌍방에게 부담을

주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음

4. 정책 제언

- 북·러관계 밀착에 작용하는 실질적인 원인에 초점을 맞추어 양국관계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모색해야 함
 - 특히 군사 협력의 진전 상황과 북한 내 러시아 해군 진출 가능성에 주목
 - 러시아의 동해 진출은 중국으로서도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음
- 북·러 협력, 특히 경협의 세부적인 조치들에 대해 매달리기보다는 종합적인 접근책을 세우고 점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 러시아의 개성공단 진출은 당면한 현안이 될 수 있음
 -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별목공 진출 사례에서 보듯이 임금 문제 등에 있어 북한이 러시아의 경우를 들어 한국에 지속적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 높음. 북한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러시아나 중국 등으로의 전환을 거론할 수 있음
 - 러시아의 대북 경협 및 진출 확대가 한국 정부의 기존 대북정책의 변화 혹은 수정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음에 유념한 대응책 모색이 필요함
- 러시아 국내정치 '애국주의' 무드 지속이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동북아 정책과 대북 정책에도 직접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¹¹⁾
 - 러시아 민족주의자들과 현 푸틴 지도부의 사고는 유사한데, 러시아 민족주의자들은 러시아를 약화시키려는 서구세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북한과 같은 반미 국가와 연대해야 한다는 논리 고수하고 있음
 - 앞서 언급했듯이, 북·러 간 협력의 실익이 장기화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양국 협력관계의 지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 국내정치의 주요 변수인 민족주의 혹은 애국주의 정서가 사라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을 활용하여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및 대미 및 대서구 정책의 수단으로 구사하려는 시도는 지속될 것임

북·러관계 밀착에 작용하는 실질적인 원인에 초점을 맞추어 양국관계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모색해야 함. 특히, 러시아의 동해 진출은 중국으로서도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음. 따라서, 북러 간 군사협력의 진전 상황과 북한 내 러시아 해군 진출 가능성에 주목해야함

주석

- 1)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한러수교 25주년 기념 2014 Russia Report: 분야별 평가와 전망』(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 2015), pp.206-208.
- 2) “Россию никому не покорить,” *Красная звезда*, Jan. 30, 2015.
- 3) Van Jackson, “Putin and the Hermit Kingdom: Why Sanctions Bring Moscow and Pyongyang Closer Together,” *Foreign Affairs*, February 22, 2015,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east-asia/2015-02-22/putin-nd-hermit-kingdom?cid=rss-rss_xml-putin_and_the_hermit_kingdom-00000(검색일: 2015.5.2).
- 4) “Россия и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создают «зловещий союз» против США—CNN,” *Телерадиокомпания звезда*, Feb. 13, 2015, http://tvzvezda.ru/news/vstrane_i_mire/content/201502131243-xp8t.htm(검색일: 2015.5.6).
- 5) Андрей Ланьков,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и Россия—шаг на пути к созданию всемирного фронта против гегемонии? June 22, 2014, <http://inosmi.ru/world/20140624/221227545.html>(검색일: 2015.5.8).
- 6) Всеволод Сазонов, “Почему Россия списала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многомиллиардный долг?” June 25, 2014, http://www.echo.msk.ru/blog/advokat_sazonov/1347000-echo/(검색일: 2015.5.8).
- 7) “러시아, 개성공단에 참여할 준비 돼 있다,” 『조선일보』, 2015년 4월 24일.
- 8) 정은숙, “ ‘김정은’— ‘푸틴’의 접점: 전개, 동기, 정책함의,” 『정세와 정책』 2015년 3월호, p.7.
- 9) “미전문가 ‘푸틴 대통령 8월 평양 방문할 듯,’” 『뉴데일리』, 2015년 1월 14일.
- 10) Джулиан Райал, Илья Коваль, “Россия и КНДР—товарищи по несчастью?” Feb. 8, 2015, <http://www.dw.de/россия-и-кндр-товарищи-по-несчастью/a-18241250> (검색일: 2015.5.6).
- 11) 우평균, “러시아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통일관,”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 경남통일교육센터 학술회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과 전략, 그리고 해법 모색』, 창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014년 11월 21일, pp.133-135.

❖ 저자 약력

■ 우평균

現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HK연구교수로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함. 주요 경력으로는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정치학과 Honorary Fellow,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등을 역임하였음. 연구 분야는 러시아 및 한반도의 정치와 국제관계, 통일문제 등이며, 주요 논저로는 『동맹과 영토분쟁』(2013 공저), 『2014 동아시아 전략평가』(2014 공저), “러시아민족주의의 성격과 푸틴주의의 민족주의적 지향”(2014), “유라시아 분쟁에서의 러시아의 개입: 조지아 전쟁과 우크라이나 사태”(2014) 등 다수.

기획 및 감수: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분쟁해결연구부장)

편집: 강현희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강윤미 (제주평화연구원 연구보조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97-858)

전화: 064) 735-6500 팩스: 064) 738-655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